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2월 27일 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12면	강릉시자율방범연합대-도의회 간담회	1
江原日報	02면	도의회 조례 입법평가 실시	2
연암뉴스		"조례 실효성 높아져"...강원도의회, 입법 평가 기능 강화	3
원주 MBC	온라인	평창교육도서관 건립 예산 삭감.. 주민 반발	4
강원도민일보	04면	"석회석 폐광지역 지원특례 강특법 개정안 신설·특별법 제...	4
江原日報	02면	강원문화재단, 우려·반대에도 ELS 투자 강행	5
강원도민일보	14면	영월 태화산마을 농식품부 '으뜸촌' 선정	6
강원도민일보	17면	고성 동광중·산업과학고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6
江原日報	온라인	혈세로 홍콩 ELS 투기해 수십억 손실...계약 당시 우려.반...	7
강원도민일보	14면	[동정] 최종수(평창) 도의원	8
강원도민일보	10면	[동정] 박호균(강릉) 도의원	8
江原日報	03면	서울 8배 면적 '공룡 선거구' 현실화 위기감	9
강원도민일보	02면	"강원 공룡선거구 확정위안, 지역특성 무시 절대 안 된다"	9
江原日報	02면	"6개 시·군 공룡선거구 강원도민 무시하는 처사"	10
강원도민일보	02면	김 지사, 6개 시·군 통합 선거구 강력 비판	10
江原日報	15면	'남북9축 고속도로' 道 지원 요청	11
강원도민일보	13면	홍천 숲속마당협동조합 농촌돌봄사업자 선정	11
강원도민일보	05면	20년 된 김치냉장고 화재 잇따라...춘천시 전수조사 실시	12
江原日報	12면	전공의 70% 사직 강릉아산병원 '기능 마비'	12
江原日報	14면	삼척서 3·1절 의미 되새긴다	13
강원도민일보	16면	온종일 돌봄 '화천커뮤니티센터' 오늘 개관	13
江原日報	21면	"상반기 신속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14
강원도민일보	10면	강릉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상품 발굴 집중	14
강원도민일보	02면	"남북9축 고속도 제3차 건설계획 반영 도차원 지원을"	15
강원도민일보	01면	철원 동송읍·철원읍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16
강원도민일보	07면	강원 도시화율 전국 최하위... 도시인구 2% 불과	16
江原日報	04면	강원특수교육원 춘천·원주·강릉서 동시 개원	17

江原日報	10면	춘천 공공하수처리장 속도 조절 불가피	17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농업인의 날' 원주 개최 의미 있다	18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수도권 산업용수 공급처로 전략하나	19
江原日報	19면	[사설] ‘응급실 뺑뺑이’ 속출, 의사들 현장 복귀부터 해야	20
江原日報	19면	[사설] ELS로 혈세 날린 강원문화재단, 철저한 책임 규명...	21

江原日報

2024 02 27 ()

12



강릉시자율방범연합대-도의회 간담회 김재건 강릉시자율방범연합대장과 임원진은 26일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에서 권혁열 도의장을 비롯한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지역 시·군 최초로 지역 내 20개 방범대 현안사업 및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놓고 간담회를 가졌다.

江原日報

2024 02 27 ()

02

도의회 조례 입법평가 실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입 4년 차에 접어든 강원형 조례 입법평가는 강원지역의 특수성을 체계적으로 반영,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심의기구인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횟수를 2회로 늘리고, 입법평가위원의 사전검토제도를 도입한다. 또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의 반영 및 집행의 적절성 여부, 타시·도 사례 조사 등 심층 분석 자료를 제시, 수준 높은 입법평가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이후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한다. 정비대상 조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 반영 여부, 사업계획 수립 여부 등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이현정기자

2024 02 26 ()


연합뉴스

"조례 실효성 높아져"...강원도의회, 입법 평가 기능 강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 평가'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도입 4년 차에 접어든 강원형 조례 입법 평가는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입법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 입법 평가 자료 심의기구인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횟수를 2회로 늘리고, 입법평가위원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한다.

또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 반영과 집행의 적절성 여부, 사업 적시 추진, 타 시도 사례 조사 등 심층 분석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수준 높은 입법 평가를 도출해 나간다.

평가 자체에만 그치지 않도록 후속 조치도 빈틈없이 한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한 입법 평가 조례 총 536건 중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468건으로, 이 중 현재까지 362건(77%)이 제정·개정되는 등 정비가 완료됐다.

도의회는 올해도 정비 대상 조례 중 미정비된 조례를 지속해서 관리하고,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 반영 여부와 사업계획 수립 여부 등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권혁열 의장은 "강원형 조례 입법 평가는 외부 기관 용역이 아닌 의회 자체평가 시스템으로 매우 견고해 타 시도의회로부터 많은 벤치마킹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입법 평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2024 02 26 ()

원주 MBC

평창교육도서관 건립 예산 삭감.. 주민 반발

취재기자 유나은
평창읍 내 유일한 도서관인 평창교육도서관
이전 신축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강원도교육청과 평창군은
평창교육 도서관을 평창경찰서 인근으로
신축 이전하기로 합의했지만,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예산 149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도의회는 도서관 이용자가 적고, 2022년 이미
6억원을 들여 시설공사를 추진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기존 도서관이 워낙 좁고 낡은데다 주차공간도 없이 경사진 곳에 있
어
이용이 저조할수 밖에 없다며 신경호 교육감을
면담하는 등 재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4 02 27 ()

강원도민일보

04

“석회석 폐광지역 지원특례 강특법 개정안 신설·특별법 제정해야”

동해시·강원연구원 공동 포럼

강원 남부 석회석 광산지역의 특수성
을 감안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안에 지원 특례를 신설해야 하고 장기
적으로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동해시·강원연구원 공동 주최의 ‘석
회석 폐광지역 지원 특례화 전략’ 포럼
이 26일 동해 현진관광호텔에서 심규
연 동해시장, 이동호 동해시의장, 현진
권 강원연구원장, 시민 등이 참석한 가

운데 열렸다.

정대현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석
회석 광산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감수한
현신이 있었기 때문에 석회석 폐광산
문제는 지역 사회나 기업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
다”며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엄광열 영월산업
진흥원장은 “석회석 광물자원 산업원
료화 사업, 석회석 폐광부지에서 저품위·
폐석 재자원화와 관광·바이오산업 등
대체산업 발굴, 캐나다·이탈리아 사례

벤치마킹 통한 석회석 폐광부지의 창조
적 활용, 석회광물자원의 탄소중립화
기반 조성 등 자원화 방안이 필요하
다”고 했다. 이날 김기하·최재석 도의원,
김창수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 사
무관, 전역찬 강원경제인연합회장, 허
우명 강원대 교수, 신영선 동해시 기획
예산담당관 등이 토론을 펼쳤다.

심규연 동해시장은 “이번 포럼이 석
회석 폐광지역 지원의 필요성 부각과
함께, 향후 개발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
대한다”고 말했다. 전인수

2024 02 27 ()

江原日報

02

강원문화재단, 우려·반대에도 ELS 투자 강행

기금 심의 당시 도·심의위원 등 강한 반대 불구 재단 50억 투자
원금 절반 날려... 심의 기능 부실 지적 道 “대책 마련·법적 검토”

속보=강원문화재단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50억원을 투자했다가 원금의 절반 이상을 잃게 생긴 가운데(본보 26일자 2면 보도) 여러 관련 기관이 리스크가 큰 투기성 상품에 혈세가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결정 당시 내부 우려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제지 없이 50억원의 막대한 혈세가 쓰였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강원문화재단은 문제의 ELS 가입 직전인 2020년 12월2일 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심의위원인 한림대 금융재무학과 A교수는 ‘원금 비보장형으로 고위험’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측은 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문화재단을 관리·감독하는 당시 강원도 문화예술평과장 역시 ‘기금 손실이 오면 큰 문제가 생긴다. 출연기관의 기금을 ELS에 투자하는 곳은 문화재단밖에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열린 지 한 달 뒤인 2021년 1월 18일 강원문화재단은 10억원을 농협의 ELS 상품에 투자한다. 이 상품은 3년 뒤인 2024년 1월22일 만기가 도래했으며 환급액은 원금의 절반도

안 되는 4억4,300만원이었다. 손실을 마이너스 55%으로 5억6,000만원을 날렸다.

신한은행에 투자한 40억원 규모의 4개 ELS 상품은 올 7월까지 차례로 계약이 끝난다.

도민 혈세로 조성된 강원문화재단의 기금은 총 217억원에 달하지만 기금 운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명목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이번 사태처럼 별다른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더욱이 재단에 대한 관리는 도청 문화예술과, 경영평가는 예산과의 권한으로 감독기능도 쪼개져 있다.

김시성 도의원은 “200억원 이상의 기금을 운용하면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데, 재단이 은행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기금 운용 심의위에서 위험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그냥 밀어 붙였다”고 말했다.

도는 손실에 대한 대책 및 법적 검토 등에 착수했다. 김진태 지사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로 지난해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당시 대표이사의 임기를 갱신하지 않고 교체했다”면서 “대책을 세워 나가는 중이며 (배임 등)법적인 검토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기영·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2 27 ()

14



최명서 군수와 심재섭 군의장, 김길수 도의원, 박종국 태화산권역영농조합대표 등 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으뜸촌'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영월 태화산마을 농식품부 '으뜸촌' 선정

체험·음식·숙박 부문 1등급

영월읍흥월리 태화산마을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으뜸촌'에 선정됐다. 태화산마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농촌관광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관련 시설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한 농촌관광사업 평가에서 체험과 음식·숙박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최명서 군수와 심재섭 군의장, 김길수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마을 홍보를 위한 소개 자료 제공과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 등의 우선 지원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태화산권역영농조합(대표 박종국)이 운영하는 태화산체험학교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삼리아지매 행복밥상' 메뉴와 함께 높은 청결도와 위생 수준을 자랑하는 숙박시설 등을 제공하면서 특별한 농촌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 텃밭에서 토마토와 고구마 등 계절별 농작물 수확에 이어 직접 수확한 농작물로 만드는 요리교실을 통해 오감을 만족시키는 한편 빵이요 체험을 비롯해 왕잉꿀벌·솔잎찜질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도 호평받고 있다. 방기준 kjbang@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 02 27 ()

17



고성 동광중·산업과학고 총동문회장 이·취임식이 함명준 군수, 이양수 국회의원, 김용복도의회 농림수산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토성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려 제30대 김인철 회장이 이임하고 제31대 박상을 회장이 취임했다.

2024 02 27 ()

江原日報

혈세로 홍콩 ELS 투기해 수십억 손실...계약 당시 우려.반대 목살됐다

강원문화재단, 농협.신한에 50억 주가연계증권 투자, 원금 절반 날려 3년전 기금 심의 당시 강원도청, 재무 전문가, 한국은행 위원 강한 반대 기금 심의 기능 부실...관리.감독도 문화예술과, 예산과 등으로 쪼개져 김진태 지사 “지난해 보고받고 대표 교체, 대책 마련과 법적 검토 중”

강원문화재단 주가연계증권(ELS) 가입 및 환급현황

은행	가입액	예치기간	환금액	수익률
	50억원	3년		
농협	10억원	2021.01.18. - 2024.01.22.	4억4300만원	-55.71%
신한	10억원	2021.04.23. - 2024.04.29.		
신한	10억원	2021.05.18. - 2024.06.03.		
신한	10억원	2021.06.09. - 2024.06.26.		
신한	10억원	2021.06.22. - 2024.07.10.		

속보=강원문화재단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50억원을 투자했다가 원금의 절반 이상을 잃게 생긴 가운데(본보 지난 26일자 2면 보도) 여러 관련 기관이 리스크가 큰 투기성 상품에 혈세가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결정 당시 내부 우려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제지없이 50억원의 막대한 혈세가 쓰였다 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의회 등에 따르면 강원문화재단은 문제의 ELS 가입 직전인 2020년 12월2일 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심의위원인 한림대 금융재무학과 A교수는 ‘원금 비보장형으로 고위험’이라고 지적한 다. 한국은행측 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문화재단을 관리.감독하는 당시 강원도 문화예술과장 역시 ‘기금 손실이 오면 큰 문제 가 생긴다. 출원기관의 기금을 ELS에 투자하는 곳은 문화재단 밖에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열린 지 한달 뒤인 2021년 1월18일 강원문화재단은 10억원을 농협의 ELS상품에 투자한다. 이 상품은 3년 뒤인 2024년 1월22일 만기가 도래 했으며 환급액은 원금의 절반도 안되는 4억4,300만원이었다. 손실을 마이너스 55%으로 5 억6,000만원을 날렸다.

신한은행에 투자한 40억원 규모의 4개 ELS상품은 오는 7월까지 차례로 계약이 끝난다.

도민 혈세로 조성된 강원문화재단의 기금은 총 217억원에 달하지만 기금 운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명목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이번 사태처럼 별다른 구속력을 갖 지 못한다. 더욱이 재단에 대한 관리는 도청 문화예술과, 경영평가는 예산과의 권한으로 감 독기능도 쪼개져 있다.

김시성 도의원은 “200억원 이상의 기금을 운용하면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데, 재단이 은행 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기금운용 심의위에서 위험하다는 문제제기 가 있었음에도 그냥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도는 손실에 대한 대책 및 법적 검토 등에 착수했다.

김진태 지사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로 지난해 이 같은 사 실을 보고받고 당시 대표이사의 임기를 갱신하지 않고 교체했다”면서 “대책을 세워나가는 중이며 (배임 등)법적인 검토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민일보

2024 02 27 ()

14



최종수(평창) 도의원은 27일 오후 2시 알펜시아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강원사과병해충방지 체계 교육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2 27 ()

10



박호균(강릉)도 의원은 27일 오후 2시 단오제전수

교육관에서 열리는 강릉시소상공인연합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서울 8배 면적 '공룡 선거구' 현실화 위기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여야 29일 본회의 처리 위한 데드라인 남기고 정개특위 무산
강원자치도 정치권·도민 '상경시위·보이콧 예고' 강력 반발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강릉-양양’, 춘천 단독 분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무려 6개 시·군이 묶인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은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한다.

전북 등 반발이 거세고, 여야 모두 ‘공룡 선거구’ 탄생이 부적합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던 만큼 강원지역은 결국 현행 선거구대로 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협상 기간을 연장한 뒤 3월 임시국회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선거구 확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미 강원특별자치도 시·군변영희장을 비롯해 여야 강원도당, 시·군의회 등은 이런 ‘공룡 선거구’ 확정안에 “강원도민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하며 상경 시위 및 선거 보이콧까지 예고한 상태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물리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막판까지 팽팽한 대립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강원을 비롯해

서울=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4·10 총선 선거구 확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6개 시·군이 묶인 ‘공룡 선거구’ 탄생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협상 ‘데드라인’인 26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선거구 확정안은 지난해 12월5일 확정위가 국회에 보내온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춘천 등 21대 총선에 적용된 현행 선거구 일부가 위헌이어서 여야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위헌 요소를 제거한 확정위 원안을 의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확정위 원안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개최 예정이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무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확정안을 수정하려면 이날 오후까지 국회 정개특위를 열어 합의안을 의결한 뒤 확정위로 넘겨줘야 하지만 이를 처리하지 못한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전북 의석을 1석 줄이는 대신 부산 의석도 1석 줄일 것을 요구하면서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확정위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구수에 따른 지역별 국회의원 정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며 민주당 요구에 선을 긋고 있다. 또 기존에 합의한 강원 선거구 현행 유지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이번 총선

“강원 공룡선거구 확정위안, 지역특성 무시 절대 안 된다”

6개 시·군 통합 논란 확산

도정치권 반대 적용시 대혼선

오늘 민주당 의총 '분수령'

속인과양 추가 논의 불가피

속초=4·10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도내 6개 시·군을 통합한 안이 포함된 선거구획정위원회 자체안 적용을 요구하면서 논란(본지 2월 26일

자 1·3면 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7일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가 선거구 획정 방향을 가능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선거구획정위 자체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강원도는 초대형 기형 선거구를 떠안게 돼 지역사회의 민심이 폭발하며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7일 예정된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6일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서 “최초에 만들어진 확정위안은 민주당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안이지만, 더 이상 획정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확정위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획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획정위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민주당은 전통적 텃밭인 호남 지역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의석감축 및 대규모 행정구역 조정이 예상되는 전북·전남 지역 의원들은 27일 의총에서 지역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

이고 있다.

도정치권은 확정위원회안 관철에 전면 반대하고 있다. 춘천갑 단수 공천을 확정받은 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춘천지역에선 춘천이 분구되는 확정위안이 반가울 수 있지만, 강원 전체로 보면 6개 시·군이 통합되는 것은 절대 말이안된다”면서 “양당 지도부가 원만하게 꼭 풀어야 할 문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 의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확정위안이 그대로 적용되

면 도내 여권은 대혼선에 빠진다. 경선실사가 예정된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은 물론 공천심사 결과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에 대한 추가 논의 역시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강원도의 문화와 교통, 생활면적과 정서, 지역특성을 무시하는 공룡 선거구 획정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

2024 02 27 ()

江原日報

02

“6개 시·군 공룡선거구 강원도민 무시하는 처사”

金 지사·예비후보 반발

6개 시·군을 묶는 공룡 선거구 출현 가능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작심 비판했고 예비후보들도 잇따라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김진태 지사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강원도 내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6개 시·군을 묶는 공룡 선거구는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여야 중 어느 일방이 처리해서는 안 되고 선거의 룰을 바꾸

는 것은 반드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개인적으로는 비례대표 1석을 줄여 강원도에 1석을 늘려주는 것도 충분히 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정의당 도당은 “생활권·지역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선거구에 도민들의 피로와 분노는 쌓여 가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강원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선거구를 확정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춘천-철원-화천-양구를 이민찬 예비후보는 이날 춘천시 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면적 특례 신설로 선거구 확정 논란을 끝내고 지역 대표성을 확보해 지방 소멸을 막겠다”고 밝혔다. 변지량 예비후보도 “5개 이상 시·군을 통합할 수 없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통합선거구를 불가피하게 확정할 때에는 인구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전성 춘천-철원-화천-양구를 예비후보는 “강원도민을 철저하게 우롱하는 이번 선거구 변경안에 분노와 모멸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최기영·정윤호기자

2024 02 27 ()

강원도민일보

02

김 지사, 6개 시·군 통합 선거구 강력 비판

“비례 1석 줄여 강원 1석 늘려야”

속보=김진태 지사가 도내 6개 시·군이 묶인 공룡선거구(본지 2월 26일자 1·3면)와 관련해 “이건 완전히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김 지사는 26일 오전 도청에서 가진 언론간담회에서 “선수들이 달리고 있는 중간에 룰이 바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나온 선거구 확정위원회안으로는 강원도내 6개 시·군의 공룡선거구(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가 나왔다. 이건 완전히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구확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확정안에는 강원도의 경우 철원군과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속초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이 묶인 기형선거구가 제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확정위 원안 처리 결정 방침을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저는, 강원도에 의석수가 하나 더 늘어나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는 비례대표 한석을 줄여서 우리 강원도에 한 석을 늘려주는 것도 충분히 방안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덕형

2024 02 27 ()

江原日報

15

‘남북9축 고속도로’ 道 지원 요청

〈양구~경북 영천〉

최승준 추진협의회장, 김진태 지사 간담회서 건의
김 지사 “국토부 제3차 고속도로 계획 포함 노력”



◇최승준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장이 26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김진태 지사와 현안 간담회를 갖고 남북9축 고속도로의 국토교통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정선】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건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최승준(정선군수)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장은 26일 강원자치도청에서 김진태 지사와 지역 현안 간담회를 갖고,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해 국토교통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남북9축 고속도로’ 반영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김진태 지사는 “남북 9축 고

속도로는 도내 신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국토교통부 제3차 고속도로 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남북9축 고속도로는 양구에서 정선을 거쳐 경상북도 영천까지 309.5km 구간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4조8,000억여원으로 추산된다.

남북9축 고속도로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포함돼 있지만 실질적인 고속도로 건

설을 위해서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사업에 반영되어야만 시행이 가능하다. 지난해 7월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와 경북 10개 시·군 자치단체 시장·군수로 구성

된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를 꾸리고 고속도로 조기추진을 위한 협력과 제3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남북9축 고속도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최 군수는 이날 지역 최대 현안으로 강원랜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김진태 지사와 논의하며 강원특별법 특례에 반영해 타 특별자치도에 선례를 남기기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한 관광진흥법 영영준칙을 바꿔 출입일수와 베딩한도 등을 늘리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최 군수는 “지역 소멸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북9축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인 만큼 강원특별자치도와 공조체계를 갖춰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석기자 kim711125@

강원도민일보

2024 02 27 ()

13

홍천 숲속마당협동조합 농촌돌봄사업자 선정

〈주민생활돌봄공동체 부문〉

농어촌공사 도내 유일 선발
제로웨이스트·생태교육 진행
농촌삶 향유 플랫폼 구축 목표

홍천 ‘숲속마당협동조합’이 최근 2024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의 주민생활돌봄공동체 부문 신규사업자로 선정됐다.

26일 숲속마당협동조합과 홍천군

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지원개발원은 전국의 신규사업자로 주민생활돌봄공동체 5곳, 농촌돌봄농장 15곳을 선정했으며 홍천 숲속마당협동조합은 강원특별자치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주민생활돌봄공동체 부문에 새롭게 선정됐다.

숲속마당협동조합은 농촌의 생태적 가치를 소중히하는 생태교육전문가 공동체로, 농촌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24절기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활동하고있다. 조합은 생태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 대상 ‘지구별을 살리는 제로웨이스트’, 청소년 대상 ‘어린이 생태나들이’, 교육기관 대상 ‘숲속인생학교’, 복지기관대상 ‘산촌텃밭정원’ 등을 진행했다.

조합은 이번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선정으로 △지역아동대상의 생태순환텃밭교실 △귀농귀촌인대상 생태정원교육 △지역어르신대상 생

활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독거노인 대상의 약사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약손 서비스’ 등을 계획하고있다.

박순웅 숲속마당협동조합이사는 “농촌의 생태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생활서비스 공급거점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현

2024 02 27 ()

강원도민일보

05

20년 된 김치냉장고 화재 잇따라...춘천시 전수조사 실시

동내면 주택서 사망사고 발생 지역 내 50여건 보유신고 접수 “생산연도·리콜 여부 확인 당부”

출시 20년이 다 돼가는 김치냉장고가 화재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춘천시가 해당 김치냉장고에 대한 자체 전수 조사에 나섰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시는 내달 13일까지 지역 내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위니아 답채 김치냉장고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지난 14일부터 1달간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날까지 춘천에서만 50여건의 해당 냉장고 보유 신고가 접수됐다.

춘천시가 이번 조사에 착수한 이유는 해당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 사망 사고가 최근 춘천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달 21일 오전 4시 21분쯤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의 한 2층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5명 중 4명이 탈출했으나 발화지점에 가까이 있던 90

대 여성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소방당국은 감시결과 이번 화재가 문제의 김치냉장고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2월 26일까지 최근 3년간 강원도내 김치냉장고에 의한 화재 건수는 총 39건으로 이중 82.1%(32건)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위니아 답채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12명, 재산피해는 2억 6000여만원이라고 전했다.

문제가 된 2005년 9월 이전 생산분

위니아 답채 김치냉장고는 장기 사용으로 인해 노후되면, 화재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전기신호를 제어하는 스위치인 릴레이 부품 주변에 습기와 먼지 등이 붙어 표면을 따라 전류가 흐르는 트래킹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조사는 지난 2020년 12월에 판매된 278만여 대의 해당 제품을 대상으로 리콜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아직 리콜 조치를 받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 아직 전국에 1만여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춘천시는 2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문제의 김치냉장고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 해당 냉장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퇴계동 32건, 석사동 10건, 강남동 2건, 신사우동 5건 등 모두 49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중이니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위니아 답채 김치냉장고를 소유하고 있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연락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재혁 jhpp@kado.net

2024 02 27 ()

江原日報

12

전공의 70% 사직 강릉아산병원 ‘기능 마비’

입구 진료제한 안내문 게시 시민 불편 장기화 불안감도 병원 “수용여부 사전 확인”

【강릉】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며 의료 공백이 점차 커지고 있다.

26일 강릉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 입구에는 전공의 사직에 따른 진료 제한 안내문이 게시돼 있었다.

강릉아산병원 측은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 인력 부족으로 경증 환자 및 일부 진료가 불가함을 알리며 진료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양해를 부탁했다.

이날 중앙응급의료센터 중

합상황판에 따르면 강릉아산병원 응급실은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이후 경증 수용과 야간 소아 진료, 정형외과, 복막염을 제외한 외과 수술 등이 전공의 인력 부족으로 불가한 상황이다.

특히 진료를 받더라도 진료 결과에 따라 입원이나 치료가 불가할 수 있어 환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영동지역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인 강릉아산병원의 파업이 장기화되자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모(28·강릉 교동)씨는 “25개월 된 아기가 피부 질환이 있어 소아과를 예약했는데 다음달 말로 한 달이나 미뤄졌다”며 “사실상 병원으로서 기

능을 못 하고 있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하소연했다.

강릉아산병원은 33명의 전공의 중 70%인 23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일부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근무하고 있지만 의료 공백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공의 이탈로 지난주까지 평소보다 16%가량 수술이 연기된 데 이어 이번 주부터는 수술 연기 비율이 40%까지 확대됐다.

강릉아산병원 관계자는 “경증 환자들은 협력 병원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119 이송이나 전원 시 수용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류호준기자 gwhojun@

2024 02 27 ()

江原日報

14

삼척서 3·1절 의미 되새긴다

4·15독립만세운동 재현·기념식 진행 본보 주최 건강달리기 통해 주민 화합

【삼척】올해 제105주년을 맞는 삼척지역 3·1절 기념행사가 다채롭게 치러진다.

삼척초등학교 삼척 4·15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회는 3월 1일 모교와 시가지 일원, 삼척문화예술회관에서 독립만세운동 재현 및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오전 10시 삼척초교 운

동장에서 기념비 헌화·분향에 이어 시가지 행진이 진행된다. 또 우체국 앞 사거리에서 삼척 4·15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하고, 삼척문화예술회관에서 기념식을 갖는다.

삼척 4·15독립만세운동은 1919년 4월15일 삼척보통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돼 일제탄압

에 저항했던 대표적인 독립만세운동이다. 매년 기념사업회를 주축으로 독립유공자 및 각급 기관·단체장, 시민, 학생, 자원봉사자 등 1,000여명이 참여해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오후 1시 삼척시청 앞 광장에서는 강원일보사가 주최하는 3·1절 기념 삼척시민 건강달리기대회가 개최된다.

연이은 폭설과 기상이변으로 겨울내내 잔뜩 움츠렸던 지

역사회가 기지개를 켜고 시내 5km 구간을 완주하며 3·1절 정신의 의미와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주민 화합을 이루고 심신을 단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각급 기관·단체에서 제공한 푸짐한 경품이 주점으로 전달되고, 자원봉사센터, 적십자봉사회, 모범운전자회 등이 자원봉사활동을 펼쳐 의미를 더한다.

황만진기자 hmj@kwnews.co.kr

2024 02 27 ()

강원도민일보

16

온종일 돌봄 ‘화천커뮤니티센터’ 오늘 개관

내달 4일부터 서비스 본격 운영 영어·독서·문해력 교육 진행 방과 후 수업 등 학습공간 제공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초등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화천커뮤니티센터가 27일 접경지역 화천에서 문을 연다.

군은 이날 오후 2시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준공식을 갖고 오는 3월 새학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화천읍 화천초교 옆에 들어선 화천커뮤니티센터는 새학기부터 초등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온종일 돌봄을 시행하는 것을 비롯해 초·중·고교생들을 위한 학습과 방과 후 수업 공간 역할 등 복합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포함 사업비 216억원을 들여 착공 4년 만에 센터를 준공했다. 연면적 5135㎡ 규모의 센터는 지하 1층에 공연장, 1층에 실내놀이터와 파티룸, 2층에 돌봄시설과 실내체육관, 창의교육실, 3층에 돌봄시설과 장난감대여소, 유아 놀이실, 4층에 글로벌 교육실과 진로진학 상담실, 스터디 카페

등을 갖추고 있다.

군은 이날 준공식 이후 커뮤니티센터 실내 놀이터 등 시설을 우선 개방하고 새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4일부터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 운영에는 공무원과 센터장, 돌봄교사 등이 투입되며 학기 중에는 평일 하교 후부터 오후 7시까지, 방학 중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돌봄 시간에는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영어와 독서, 문해력 증진 교육, 창의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특별활동이 진행된다.

군은 이를 위해 돌봄 각 반에는 내국인 담임과 원어민 담임을 각각 배치했다.

센터 운영에 따라 지역 학부모들은 돌봄은 물론, 사교육비 부담까지 덜 수 있게 됐다. 군은 또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기 위해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천 스마트 안심셔틀도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63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사내면 지역에도 화천커뮤니티센터와 같은 기능을 담당할 사내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안의호

“상반기 신속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강원조달청-홍천국토관리사무소-원주시 간담회

강원지방조달청과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원주시 등 3개 기관이 신속 재정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3개 기관은 26일 원주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상반기 신속 재정집행을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강원조달청은 조달수수료 감경제도와 조달절차 단축을 통해 각 기관의 신속 재정집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시적-계약 특례 등의 제도를 안내하고 속도감 있는 계약 업무처리

와 친절한 조달행정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홍천국토관리사무소는 2월 현재 배정된 799억원 규모 국도 사업비의 37.7%(301억원)를 1분기 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6월 말까지 도로 사업 조기 발주를 통해 올해 사업비의 65%(519억원)를 집행할 계획이다.

원주시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율을 정부 목표(54.3%)보다 1.4% 높은 55.7%로 설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태훈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하



◇강원지방조달청(청장:이병철), 홍천국토관리사무소(소장:원종덕), 원주시(시장:원강수)는 26일 원주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신속 재정집행을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집행 대상액 9,552억원 중 5,320억원을 상반기 중 집행한다. 재정집행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투자사업을 집행하고 장애요인을 해소하

는 등 중점 관리에도 돌입한다.

이병철 강원지방조달청장은 “강원권 민생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유관기

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종덕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은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며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관내 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반적인 지역경기가 살아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며 “가용자원을 모두 투입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이기자 haha@

강원도민일보

강릉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상품 발굴 집중

시, 내달 6일까지 상품 공모

세계 100대 관광도시 진입을 목표로 두고 있는 강릉시가 올해 외국인 관광객 30만명 유치를 위해 우수 여행상품 사업 공모에 나서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발굴에 착수, 26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인바운드 우수 여행상품 공모사업을 접수키로 했다.

이번 인바운드 여행상품은 최근 국내 여행에 관심을 높이고 있는 일본

과 대만 관광객을 집중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모사업은 강릉에 종합여행업으로 등록돼 있거나 강릉지역 여행사와 파트너 관계에 있는 일본, 대만 인바운드 전문여행사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받는다. 시는 우수 여행상품으로 선정된 업체에 버스 등 차량운행 지원비를 지급한다. 여행상품으로 선정된 업체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해외 인바운드 관광객을 모집, 강릉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강릉만의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우수 여행상품을 적극 발굴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보다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배 sbhong@kado.net



최승준 남북9축 고속도로추진협의회장은 26일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 김진태 지사에게 국토교통부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남북9축 고속도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사진제공=강원도청

“남북9축 고속도 제3차 건설계획 반영 도차원 지원을”

추진협, 김진태 지사 면담 협력 약속
강원랜드 카지노 규제 혁신 등 요청

남북9축 고속도로추진협의회(회장 최승준 정선군수)는 26일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 김진태 지사와 면담을 갖고 현안사업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최승준추진협의회장은 이날 김지사를 만나 국토교통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남북9축 고속도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관련, 김지사는 "남북9축 고속도로가 국토교통부 제3

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군수는 또 지역현안인 강원랜드 경쟁력 약화에 따른 폐광지역 재 공동화 우려와 관련, 강원랜드 카지노 규제 혁신과 복합리조트 육성을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남북9축 고속도로추진협의회는 지난 2023년 7월 강원랜드 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 10개 시·군자치단체 시장·군수들이 모여 추진협의회를 구성, 초대회장에 최승준

정선군수가 선출됐다. 남북9축 고속도로는 양구에서 출발, 정선을 거쳐 경북 영천까지 309.5km 구간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4조 8000억원이 소요된다. 유주현

2024 02 27 ()
01

강원도민일보

철원 동송읍·철원읍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축구장 면적 421배 규모
건축물 신·증축 등 가능

군(軍) 7개 공항 주변과 강원 철원 등 4개 접경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300만평이 해제된다. 강원도내에서는 축구장 면적(7140㎡)의 421배에 달하는 철원군 동송읍, 철원읍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 등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군과 지역 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

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국적으로 총 1억3백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김선호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군 비행장 주변 287km²,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km²,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 14km² 등 총 339km²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여의도면적의 117배다.

먼저 충남 서산과 경기 성남 등군 공항이 있는 7개 지역에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비행안

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과 협의 없이 건축물 신·증축,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강원 철원 등 4개 접경지역에서도 군사기지 및 시설의 유무, 취락지역 및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해제 지역에서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 신·증축이 가능해지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철원군은 행정구역 대비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94.6%로 줄어들게 된다.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2024 02 27 ()
07

강원 도시화율 전국 최하위... 도시인구 2% 불과

강원 74%, 수도권보다 23%p 낮아
도시 면적 비중 4.4% 지속 감소
노령화지수 20년만에 4배 급증

강원권 도시화율이 73.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노령화지수는 20년만에 4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통계청의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을 발표했다.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는 인구 격차 표시 및 군집화(유형), 군집화 유형 분류, 통계

적 지역분류 등 통계적 지역분류의 4단계로 진행됐다. 격자내 인구 1500명 이상·군집화 인원 5만명 이상은 '도시', 격자내 인구 300명 이상·군집화 인구 5000명 이상은 '도시 클러스터', 농촌은 양쪽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다.

이러 행정구역 인구의 50% 이상이 1개 이상의 도시에 거주하면 도시, 50% 미만인 도시에 거주하고 인구의 50% 이상이 도시 클러스터에 거주하면 준도시로 재분류했다. 또 행정구역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면 농촌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도시인구 중 50%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으며 강원권은 같은 기간 2%대에 그쳤다.

수도권의 도시인구비율은 2000년 50.8%에서 2021년 53.5%로 2.7%p 올랐으나 강원권은 2.6%에서 2.4%로 오히려 줄었다. 강원권 도시면적 비중도 2000년 5.2%에서 2010년(4.7%) 4%대로 추락했고, 2021년 4.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강원권 도시화율도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2021년 강원지역 도시화율은 73.9%로 수도권(97.1%)과 비교해 23.2%p 차이가 났다. 전국에서 도시화율이 70%대인 지역은 강원권과 전라

권에 불과하다. 또 강원권은 2010년(74%) 대비 도시화율이 소폭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동해 도심이 도시클러스터로 쇠퇴했고 태백, 고성, 평창 등의 지역은 도시클러스터가 감소했다. 2010년 이후에는 원주 혁신도시와 춘천 재개발 사업으로 도심이 확장됐다.

노령화지수는 138.3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충청권(93.1)과 비교해 45.2p나 차이가 났다. 특히 2000년(34.8) 대비 20년 만에 4배나 증가했고, 2010년(67.1)보다 2배 늘어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우진

2024 02 27 ()

江原日報

04

강원특수교육원 춘천·원주·강릉서 동시 개원

도교육청 추진 성과·계획 발표
연말 착공 2026년 3월 문 열어
3개 지역별 심화프로그램 운영

‘강원특수교육원’이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 지역에서 2026년 3월 동시에 문을 연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신경호)은 26일 강원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1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전국 최초로 3개 지역에 동시 설립되는 강원특수교육원은 춘천 신동초교, 원주 영서고 실습지, 강릉 노암초

교 제2운동장에 각각 설립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1년간 춘천, 원주, 강릉 3개 지역을 순회하며 도민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 지역별 부지를 선정했다. 또 특수교사를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재정투자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공공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를 이행했다. 최근에는 각 지자체와 관련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3개 지역에서 동시에 설계를 진행한 후 연말 착공해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원 이후에는 특수교육 분야 교사·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이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해 3개 지역의 도시전략과 함께하는 특화된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춘천에서는 다양한 연구·연수 및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원주에서는 진로 등 직업교육, 강릉은 힐링 및 문화예술교육에 중점을 둔다.

신경호 교육감은 “학생들의 꿈 실현과 기회 제공을 위해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강원특수교육원이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밝히고 성장을 돕는 배움의 터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동휘기자 yulnyo@

2024 02 27 ()

江原日報

10

춘천 공공하수처리장 속도 조절 불가피

【춘천】춘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사업이 정부 심의 절차 지연에 따라 추진 속도 재설정이 불가피해졌다.

시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7일 진행할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단일 안전이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안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던 시 공공하수처리장 심의 등은 우선순위에 밀려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당초 지난해 말 공공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의 정부 승

정부 심의 안전 상징 불발...역세권 개발 지연 우려도
시 “금융권서 높이 평가...상반기 내 정부재승인 요청”

인을 염두에 뒀으나 사전 행정 절차가 늦어져 신청 시기를 놓친 데다 올해 첫 심의마저 안전 상징이 불발되자 난처한 기색이다. 정부 승인이 늦어질 경우 현재 근화동 처리장 이전에 맞춰 2028년부터 사업 추진을 계획 중인 춘천역세권 개발에 직접적인 여파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공하수처리장 이

전 사업은 최다 지분 참여사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불안 요소로 남아 있다. 기재부도 사전 협의 과정에서 이 같은 우려를 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는 이달 초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투자 참여 의견을 통해 정상 추진 의지를 밝혀 와 자금 확보 우려는 줄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투자사

업 심의 개최 주기를 고려, 상반기 내로 정부 승인을 다시 노리겠다는 입장이다. 상반기 정부 승인을 전제로 연내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날 경우 내년 초 착공이 가능하다. 이 경우 준공 시기는 2028년 말로 당초 시의 구상과 비교해 반년 이상 늦춰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 SOC 사업은 민간 분양 사업 대비 위험도가 낮고 특히 하수처리장은 급격한 실적 변동도 없어 금융권에서도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며 “기재부에 기타 사업

시기를 고려하더라도 빠른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 공공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은 노후화된 근화동 시설을 철전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이다.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뒤 소유권을 시에 넘기는 대신 일정 기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뤄진다. 태영건설을 대표사로 6개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 02 27 ()

/ 19

'농업인의 날' 원주 개최 의미 있다

-기념일 발상지서 정부 행사건의 관철 기대

대한민국 '농업인의 날' 정부 행사를 원주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 원주시가 이를 정부에 공식 제안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원주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시작된 곳으로, 한국 농업과 농업인의 상징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하지만 국가차원의 농업인의 날 행사는 매년 타지역에서 열려 시민과 지역 농업인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전국의 농업인들이 함께하는 행사는, 발상지인 원주에서 개최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개최 의미나 역사성을 고려해 원주 개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국내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농민은 흙(土)에서 태어나 흙(土)과 더불어 살다가 흙(土)으로 돌아간다"는 삼토(三土) 사상을 담아 '土'와 '土'를 합쳐 흙 토(土)가 되는 매년 11월 11일 11시에 개최됩니다. 올해 61주년을 맞는 농업인의 날과 기념행사는 원주에서 시작됐습니다. 1964년 11월 11일 농촌지도자연합회 전신인 농사개발구락부 원성군연합회장을 역임한 고원흥기 선생의 제안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를 원주 지역사회가 받아들여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고 매년 기념하고 있습니다. 정부 도시의 건

의를 수용, 1996년 농업인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의 날을 기념할 전국 단위 정부행사는 매년 원주가 아닌 정부종합청사나 타 지자체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도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으나, 규모나 의미 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정부 기념식은 경기 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8개 지역 기념식과 생중계로 연결해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농민 등 5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유공자 160명에 대한 정부 포상이 수여됐습니다.

농업인의 날 원주 개최는 당연합니다. 행사가 태동한 원주를 외면하고, 다른 지역에서 개최하면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시의 건의는 타당합니다. 시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올해부터 농업인의 날 정부 기념행사를 발상지로 역사적 당위성이 있는 원주에서 개최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장소, 개최 방안 등 성공 개최를 위한 구체적 제안도 포함됐습니다. 원주 개최는 도시의 위상을 높인다는 차원을 넘어, 한국 농업의 과거를 되새기고 미래를 모색한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원주시와 농업인들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이 뒤따라야 할 사안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2 27 ()

/ 19

수도권 산업용수 공급처로 전략하나

-강원첨단산업 뒷전, 화천댐 용인반도체에 쓰인다니

강원지역이 수도권에 전력을 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먹는 물에 산업용수 까지 공급하는 처지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월 23일 국가수자원 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올해부터 10년간 댐관리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댐관리 기본계획(2024~2033)'을 수립했다면서 그 성과로 화천댐 물로 첨단산업단지의 용수공급 방안을 해소하겠다고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곧 화천댐의 물자원을 강원지역 첨단산업발전이 아닌 경기도 수도권에 조성하는 용인반도체산업단지의 용수로 쓰기로 했다는 결정을 홍보한 것입니다.

화천댐 수자원을 이용해 가까운 강원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 현지 주민 고소득 일자리와 수입 창출을 위한 자산으로 쓰는데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비대화를 촉진하는 자원 공급처로 삼겠다는 정책 수립은 매우 유감입니다. 댐 소재지에 대한 산업 육성 투자는 외면하면서 별안간 경기도 용인으로 강원지역 물을 끌어다가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발상은 수탈적 행위로 용납이 어렵습니다. 수도권 전력 과 먹는 물 공급을 위한 복합적인 희생에 대한 대가가 또 다른 자원의 수탈로 확대되는 것은 비윤리적입니다.

막대한 국가재정을 경기도 용인반

도체산업에 투입하면서 정작 수자원 보존을 위해 수십년간 각종 생활 불편 및 자산 가치 하락을 감수해 온 현지 주민이 견뎌온 박탈감과 허탈감에 기쁨을 보는 격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6년의 '댐건설 관리법' 개정 이후 처음 수립되는 10년 단위 국가차원의 댐 관리 계획으로 실행력이 상당하기에 우려가 큼니다.

환경부는 이번 10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댐의 기능과 가치 증대 5대 추진 전략 중에 '지역과 함께하는 댐 가치 증진'을 내세웠습니다. 소양강댐을 비롯해 댐 소재지가 많은 강원지역에서는 물자원을 이용한 국가차원의 첨단산업 육성을 줄곧 촉구해 왔습니다. 10년 전부터 춘천에서는 수열에너지 융합클러스터 구축을 꾀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투입하느라 지지부진합니다. 국비를 투입하면 훨씬 수월하게 완료됐을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환경부가 표방한 '지역과 함께하는 댐 가치 증진'에 어떻게 해당하는 것인지 묻게 됩니다. 단지 수상태양광이나 설치하고, 보조금이나 지원하는 등의 정도를 '상생'으로 여겨서는 곤란합니다. 또한 반도체산업 육성을 부르짖어 온 강원도 입장에서 더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명이 필요합니다.

江原日報

2024 02 27 ()

/ 19

‘응급실 뺑뺑이’ 속출, 의사들 현장 복귀부터 해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근무 이탈이 1주일이 지났다.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전공의들의 집단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와 졸업생, 전임의(펠로) 일부가 집단행동에 동조하면서 ‘의료 사태’가 이번 주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의사들은 환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내 환자들이 이송된 병원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강릉의 응급 환자 A(62)씨는 지난 22일 강릉동인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병원에 전문의가

없어 원주기독병원으로 옮겨졌다. 춘천에서도 이날 밤 11시48분께 의식을 잃은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119 구급대가 강원대병원 등 7개 병원 응급실을 수소문했지만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 결국 환자 B(67)씨는 전문의가 확보될 때까지 구급차 안에서 대기, 신고 접수 2시간54분 만에 춘천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집단행동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는 의사의 존재 목적을 부인하는 것이고, 이는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정부도 2,000명 증원이란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전공의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야

한다. 정부가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게 복귀 마지노선을 29일로 제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날까지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다.

전공의들 집단 사직·근무 이탈 1주일 넘어 집단행동,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어 의사들, 병원 밖 민심 제대로 파악해야 할 때

응급의료 현장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사태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된다. 정부가 책임을 따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전공의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강대강으로 치달으면 그 피해는 국민이 떠안는다. 정부와 의협은 협상 테이블에 하루속히 앉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마지노선을 제시한 만큼 그 이후의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잣대는 다른 이익 집단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한다면 힘없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누가 지켜 주나.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달래기 위해 어설픈 타협을 하면 이들의 특권 의식만 키워 주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의사들은 병원 밖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읽어야 할 때다.

江原日報

2024 02 27 ()

/ 19

ELS로 혈세 날린 강원문화재단, 철저한 책임 규명을

〈주간연계증권〉

강원문화재단이 혈세로 주간연계증권(ELS)에 수십억원을 투자했다가 원금의 절반 이상을 날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본보 취재 결과 강원문화재단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농협과 신한은행을 통해 홍콩 H지수 ELS에 투자했다. 투자금은 10억원씩 5차례, 전부 50억원에 달한다. 재단의 총 기본재산 217억원 중 23%에 해당하는 막대한 혈세를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기성 금융 상품에 속된 말로 몰빵한 셈이다. 강원문화재단의 ELS 만기는 모두 3년이다. 이 중 농협을 통해 10억원에 가입한 상품이 지난달 말 가장 먼저 만기가 도래했다. 재단이 환급받은 금액은 4억 4,300만원으로 수익률 마이너스 55%였다. 더 큰 문제는 50% 이상의 손실률이 예상되는 신한은행에 가입한 40억원 규모의 ELS도 올 4월부터 7월까지 차례로 만료된다는 점이다. 강원문화재단의 손실액이 최대 3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무모한 투자에 따른 대가가 큰 만큼 도민 입장에서선 분통이 터질 일이다.

ELS와 기타 파생결합증권(DLS) 등은 은행 예금같은 보호 장치가 전혀 없는 투자 상품이다. 발행사인 증권사나 은행이 파산하면 원리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도 있으며 그동안 원금 손실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

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공기관이 혈세로 리스크가 큰 투기성 상품인 ELS에 투자했다는 것이 도대체 납득이 안 간다.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이 세금 수입을 정기예금이나 원금 보장형 금융 상품에 투자해 원금 손실 위험성을 회피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강원문화재단은 2015년부터 예금을 활용해 ELS에 꾸준히 투자해 왔다. 물론 2020년까지 9억원가량의 수익을 냈다고는 하지만 공공기관이 도민 혈세 50억원을 ‘돈놀이’를 하듯 굴린 간 큰 결정에 대한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다.

거액의 혈세를 ELS에 투자한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부터 석연찮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예금이 보장되지 않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다. 강원문화재단은 7월 모든 ELS 계약이 종료되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도는 ELS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를 하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응분의 법적 책임도 묻고 혈세 손실도 받아 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혈세 투자를 제어할 안전장치도 보완해야 한다. 더는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 재정으로 도민 세금이 줄줄 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